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9월 6일 수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강원도민일보	01면	동해안 수산물 신선하고 안전합니다	1
강원도민일보	02면	동해안 수산물 소비촉진 캠페인	1
江原日報	01면	“동해안 수산물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2
江原日報	02면	"동해안 수산업 살리자" 팔 걷은 강원자치도	2
강원도민일보	02면	"여성의원도 위원장직 수행 필요 결속력 강화"	3
강원도민일보	22면	특자치도의회 여성의원 의정활동 간담회	3
江原日報	03면	“여성 정치 참여·동등한 기회 위해 목소리 내자”	4
MBC 강원영동	온라인	강원도의회, '강원 김치산업 육성 조례안' 등 24건 통과	5
일간투데이	14면	강원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 발의	6
뉴스줌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종수 의원, “강원 김치산업 육성 및 ...	7
江原日報	02면	재정난 ‘천원의 아침밥’ 공간 채운다	8
KBS 춘천	온라인	‘강원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8
연암뉴스		강원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참여 학교·식수 규모 늘어난다	9
NEWSIS	온라인	‘강원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10
강원도민일보	03면	강원 교원 교권침해 법률상담 근거 마련... 접근성 확보 속...	11
G1방송	온라인	'교원 무료법률상담 조례' 도의회 교육위 통과	11
연암뉴스		"교육활동 보호" 강원 교원 무료 법률상담 조례안 원안 가결	12
스포츠서울	온라인	심오섭 강원특별자치도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출산·...	13
신아일보	온라인	심오섭 강원도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 지원 ...	14
강원도민일보		강원청년 1인 가구 3분의1 "지금처럼 혼자 살 것"[1/2]	15
강원도민일보	10면	'누구나 평등한 원주' 양성평등대회 헌장 낭독·유공자 포상	17
江原日報	11면	횡성지역 학교 군용기 소음피해 대책협의	17
江原日報	19면	[강원포럼] 지자체 ‘묻지마 범죄’ 대책 절실	18
KBS 춘천	온라인	지정 요건 되는데...속초시, 접경지역 누락 ‘피해’	19
江原日報	01면	道 내년 세수 3천억 펑크 '재정한파' 우려	20
江原日報	02면	강원자치도 CI·캐릭터 우수디자인 동시 선정	21
江原日報	07면	강원 스마트관광 성숙도 전국 7위 그쳐	22

강원도민일보	04면	도내 중학생 5명 중 1명 '수학 성취기준 미달'	22
江原日報	02면	도내 첫 장애인체력인증센터 흥천서 개소	23
江原日報	03면	기업회생 신청 밝히기 하루전 20억 넘긴 양양군 '의혹투성...	24
강원도민일보	04면	경자구역 동해망상1지구 기존 시행자 소유 토지 경매 완료	24
강원도민일보	17면	[사설] 춘천 캠프페이지 개발 기대 크다	25
강원도민일보	17면	[사설] 주민참여예산 부진 씻는 개선있어야	26
江原日報	19면	[사설] 춘천 캠프페이지 2조원대 개발사업 성공하자면	27
江原日報	19면	[사설] 해외여행 수요 급증, 강원관광 경쟁력 키워야 할 때	28

2023 09 06 ()
01

강원도민일보

동해안 수산물 신선하고 안전합니다

강원도 서울서 특판전
방사능 점검 현황 설명

강원특별자치도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수산물 소비 촉진에 나섰다.

강원특자도는 5일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광장에서 '동해안 청정 수산물 특판전 및 소비촉진 캠페인'을 열고, 동해안 어업인 및 수산업계 상인 지원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태도지사와 권혁열 도의장, 한기호(국민의힘·춘천·철원·화천·양구) 국회의원, 이병선 속초시장,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김기성(춘천) 수협중앙회 대표이사, 김천수 강원특별자치도민회중앙회장, 이금선 강원경제단체연합

회장 등 200여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강원특자도의 영문표기인 '강원 스테이트'(Gangwon State)가 새겨진 티셔츠 위에 '강원 동해안 수산물, 안전해(海)요! 맛있어(漁)요!'란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메고, 서울 시민들에게 동해안 청정 수산물 특판전 리플릿 등을 배부하며 동해안 안전간직한 신선함을 전했다.

특히 김 지사는 동해안에서 잡은 문어를 직접 들어올리며 동해안 수산물의 청정성을 적극적으로 알려 눈길을 끌었다. 또

오염수 방류에 따른 불안감 해소를 위해 강원특자도가 실시하고 있는 동해안 수산물 방사능 안전 점검 현황을 세심히 설명했다.

김 지사는 "오늘 강원 수산물 마켓의 '점장'으로서 캠페인에 참여했다"며 "지금도 어부들은 비지땀을 쏟으며 싱싱한 보물을 길어올리고 있다. 그 어부들을 돕고 강원특자도를 응원하는 방법은 단 하나, 수산물을 맛있게 더 많이 드셔 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세훈

▶ 관련 사진 2면

2023 09 06 ()
02

강원도민일보



동해안 수산물 소비촉진 캠페인 강원특별자치도가 5일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광장에서 '동해안 청정 수산물 특판전 및 소비촉진 캠페인'을 전개, 김진태 지사와 권혁열 도의장, 한기호 국회의원, 이병선 속초시장이 동해안 수산물을 시식하고 있다. 사진제공: 강원특별자치도

江原日報



속초시 제공

“동해안 수산물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동해안 청정 수산물 특판전 및 소비 촉진 캠페인’이 5일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광장에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한기호 국회의원,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장, 이병선 속초시장, 김천수 강원특별자치도민회 중앙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관련기사 2면

江原日報

“동해안 수산업 살리자” 팔 걷은 강원자치도

서울서 강원 수산물 특판전
김진태 지사·지역 단체장
직접 참여 구매 동참 호소

강원특별자치도가 서울 한복판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위축돼 있는 지역 수산물의 소비 촉진에 나섰다.

5일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광장에서 열린 ‘강원 동해안 청정 수산물 특판전’에는 김진태 지사와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국회의원, 권혁열 도의장, 김천수 강원특별자치도민회중앙회장, 이병선 속초시장을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장과 관계자, 시민 등 수백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또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이금선 강원경제인단체연합회장, 김별아 강원문화재단 이사장, 안정희 도여성단체협의회장도 단체 임직원들과 함께 방문해 한마음으로 구매에 동참했다.

‘강원 동해안 수산물, 안전해(海)요! 맛있어(魚)요!’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특판전의 판매장에는 강릉 동해 속초 대포 삼척 원덕 고성 죽왕 양양 등 9개 지역 수협을 통해 신선하게 운송된 생물 수산물과 가공식품이 가득했다. 문어와 오징어 가지미 황태 미역 조개 가리비 등 제철을 맞은 37개 품목들은 30% 저렴하게 판매됐고 구매행렬이 길게 이어졌다. 내방객들은 양손 가득히 수산물 꾸러미를 들고, 밝은 표정으로 이곳저곳 들르는 등 마치 장날을 방불케 했다.

도는 오프라인 판매 행사와 함께 오는 8일까지 온라인 쇼핑물 ‘강원도몰’에서 700여개의 수산물을 20~30% 할인 판매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단상에 올라 이날 오전 삼척 정라항에서 잡은 뒤 검사까지 마친 대문어를 직접 들어 올리며 안전한 강원 수산물의 청정성을 알리는 데 힘썼다. 김 지사는 “안전하니까 팔려 나온 것”이라며 “비지뺄을 쏟으며 싱싱한 보물을 길어 올린 어부들을 돕고, 도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강원 수산물을 맛있게 더 많이 드셔달라”고 말했다. 서울=이무현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09 06 ()
02

“여성의원도 위원장직 수행 필요 결속력 강화”

여성 도의원 영향력 확대 다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여성의원들이 의회내 영향력 확대와 더불어 여성현안연구를 다짐하고 나섰다.

박윤미·양숙희·엄윤순·원미희·임미선·이지영·이승진·유순옥 등 여성도의원 8명은 5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의정활동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의장단·상임위원장직 등의 여성몫 확대, 여성 정책 연구 등의 이야기가 논해졌다. 현재 여성의원이 맡고 있는 위원장직은 이달 임기가 끝나는 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특위위원장(유순옥)이 유일하다. 도의회 내 여성의원 비중이 17%인 것을 고려하면, 매우 적은 수치다. 박윤미 의원은 “여성도 상임위원장 등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가야 한다”며 “2년차부터는 강하게 여

성들의 목소리를 내자”고 했다. 엄윤순 의원은 “여성도 상임위원장, 의장단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여야를 떠나 여성의원들도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결속력을 가지자”고 말했다.

임미선 의원은 “도의회 내 여성의원 비중이 20%가 안 되는 상황”이라며 “개인이 목소리 내기는 어렵지만 8명이 같이 낸다면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영 의원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출마한다”는 말로 시작했는데, 의정활동을 하며 아이와 떨어져 지낸 시간이 많다 보니 회의감이 들기도 한다”며 “여성현안을 논하는 자리로 함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혁열 의장은 간담회에 참석해 “선후배 간에 밀고 당겨주는 끈끈한 여성의원 모임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설화

▶ 관련사진 22면

강원도민일보

2023 09 06 ()
22

특자도의회 여성의원 의정활동 간담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여성의원 의정활동 간담회가 5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권혁열 도의회의장과 여성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여성 의원 의정활동 간담회가 5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박윤미, 양숙희, 엄윤순, 원미희, 유순옥, 이승진, 이지영, 임미선 의원과 권혁열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신세기기자 and8729@kwnews.co.kr

“여성 정치 참여·동등한 기회 위해 목소리 내자”

자치도의회 女의원 8명 의정활동 간담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여성 도의원들이 여성의 정치 참여를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을 다짐했다. 11대 도의원 48명 중 8명인 여성 도의원 전원은 5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여성 의원 의정활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임미선(국힘·비례) 도의원은 “여성의 정치참여와 동등한 기회보장을 위해 목소리를 내자”고 제안했다.

엄윤순(국힘·인제) 도의원도 “여

성들이 상임위원장 기회가 없어 하지 못하는 것이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니 여야를 떠나 여성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했다.

3선의 박윤미(민주·원주) 도의원은 “후반기 여성 도의원 중 상임위원장이 한 명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미희(국힘·비례) 도의원은 “도의원 중 여성 의원이 20%도 안 되는데 지표로도 평등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

다”고 짚었다. 이지영(민주·비례) 도의원은 “여성의 목소리를 내는 데 일조하겠다”고 했고, 양숙희(국힘·춘천) 도의원은 “주민, 의원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해내고 있다. 조언과 응원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진(민주·비례) 도의원은 “여성정책연구회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유순옥(국힘·비례) 도의원은 “여성 의원이 소수에 구애받지 않고 의정활동을 하고, 사안이 생길시 연대를 발휘하자”고 했다. 이현정기자

2023 09 05 ()

MBC 강원영동

강원도의회, '강원 김치산업 육성 조례안' 등 24건 통과

김인성



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이틀째인 오늘 모두 24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사회문화위원회에선 '강원특별자치도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이,
농림수산위원회에선 '강원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강원특별자치도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는 등
모두 24건이 각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안들은 오는 15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입니다.

일간투데이

2023 09 06 ()

14

■최종수 강원도의원

강원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 발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5일 제322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최종수 의원(국민의힘·평창)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김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 농업인의 소득 향상 및 강원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게 제정 목적이자 주된 취지이다.

최종수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김치산업화 및 기반시설 지원 등 강원특별자치도 김치산업의 육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면서 “강원의 김치산업의 경쟁력 증대 및 농업인의 소득향상, 나아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하게 된다.

/노덕용 기자 nod2015@dtoday.co.kr

2023 09 05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종수 의원, “강원 김치 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발의

강원특별자치도 김치산업 경쟁력 제고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정진태기자



▲ 최종수 의원(국민의힘·평창)

[뉴스룸=정진태기자] 강원도의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돼 관심이 쏠린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9월 5일 제322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최종수 의원(국민의힘·평창)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김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 농업인의 소득 향상 및 강원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게 제정 목적이자 주된 취지이다.

조례안에는 이를 위해 김치산업화 및 기반시설 구축 지원을 위한 사항과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발전 및 고품질 김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우수 김치재료의 사용을 위한 근거를 담았다.

또한, 김치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은 물론,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최종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21년 기준 강원도의 김치 제조업체는 전국의 6.7%인 57개소, 판매량과 판매액도 각각 전국의 28.2%와 14%인 16만273톤과 2천152억원으로 집계된다.

이와 함께, 지난 2021년 기준 도내 배추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각각 7천567ha, 39만4천3백톤으로, 전국의 대표적인 주산지로 명성을 얻고 있다.

최종수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김치산업화 및 기반시설 지원 등 강원특별자치도 김치산업의 육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면서 “강원의 김치산업의 경쟁력 증대 및 농업인의 소득향상, 나아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15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하게 된다.

누리일보, 시사일보 등 34개 언론사 보도

2023 09 06 ()

02

江原日報

재정난 ‘천원의 아침밥’ 공간 채운다

지원 조례안 도의회 농수위 통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참여 대학 수가 저조했던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5일 전찬성(민주·원주)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내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도내에서 생산된 쌀을 이용한 아침식사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대학이 부담하는 금액

이 커 재정 상황이 열악한 도내 대학 참여가 제한적이다. 조례안이 통과 되면 도가 일부 비용을 지원, 재정 부담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학의 사업 신규 참여 독려 및 대학의 지원 식수 규모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전찬성 의원은 “도내 소재 대학 15곳 중 학생 수 감소 등에 따른 재정 부담을 이유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은 7곳뿐인 실정”이라며 “학생들에게 아침 식사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도내 생산 쌀 소비를 촉진시키는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했다.

이날 농림수산위는 최종수(국힘·평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다. 김치산업화와 기반시설 구축 지원을 위한 내용 등이 담겼다.

또 김용래(국힘·강릉) 도의원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 무료법률상담 조례안’도 이날 교육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들은 오는 15일 제32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편, 기획행정위는 이날 부위원장으로 하석균(국힘·원주) 도의원을 선임했다.

이현정기자 together@kwnews.co.kr

2023 09 05 ()



‘강원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9 ‘강원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KBS뉴스 횡성 학교 ‘군용기 소음 피해’ 논의...근본 대책 ‘난감’

강원도의회 전찬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아침 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은 도내 소재 대학이 학생을 대상으로 도내에서 생산된 쌀을 이용한 아침 식사를 제공할 경우, 비용을 강원도에서 일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이달(9월) 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최현서

강원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참여 학교.식수 규모 늘어난다

아침 식사 지원 조례.김치산업 육성 조례 도의회 상임위 통과



'천원의 아침밥' 받는 학생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할 대학들을 늘리고, 현재 사업에 참여 중인 대학들의 식수 규모를 늘릴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5일 더불어민주당 전찬성(원주8)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아침 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그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내에서 생산된 쌀을 이용한 아침 식사 제공을 지원해 아침 식사 결식을 감소와 쌀 가격 안정, 농가 소득증대 등에 이바지하고자 마련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최근 호평받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서 대학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어, 재정 부담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학들의 사업 신규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

현재 사업에 참여 중인 대학들 역시 지원 식수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전 의원은 "도내 소재 대학은 어림잡아도 15곳이 넘는데 학생 수 감소 등에 따른 재정 부담을 이유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7곳뿐"이라며 "조례안을 통해 도민 건강 개선과 농업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말했다.

농수위는 국민의힘 최중수(평창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김치 산업화와 기반 시설 구축 지원을 위한 사항과 전통 김치의 복원과 계승·발전, 고품질 김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우수 김치 재료의 사용을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2023 09 05 ()

공감인포뉴스
NEWSIS

‘강원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오는 15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



사진은 강원도의회.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스시스]서백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전찬성 의원(원주8)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5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내 소재 대학에 재적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내에서 생산된 쌀을 이용한 아침식사 제공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아침식사 결식을 감소와 쌀 가격 안정, 농가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려는 취지이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최근 호평받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따라 대학들이 부담하고 있는 비용을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일부 지원하게 된다.

재정 부담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학들의 사업 신규 참여를 독려하고, 현재 사업에 참여 중인 대학들의 지원 식수 규모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엔사이드, 누리일보 등 47개 언론사 보도

강원도민일보

강원 교원 교권침해 법률상담 근거 마련... 접근성 확보 속제

도의회, 무료법률상담 조례 가결
전담변호사 부재·상담 지연 문제
낮은 월급 처우개선 필요 주장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도내 교권전담변호사의 인원을 늘리는 등 교원들의 법률상담 접근성을 높일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길선)는 5일 제322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도교육청 교원 무료법률상담 조례' (대표발의 김용래)를 원안 가결했다. 조례는 교권 침해와 관련된 민사·형사 사건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등에 대해 교원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상담을 받으려고 해도 교권전담변호사가 부재하거나 상담이 지연될 수 있는 등의 접근성 문제가 제기됐다. 강원특별자치도교

육청의 경우, 교권전담변호사의 자리 가 비어있다가 지난 5월 2년여만에 한 명이 채용이 됐다.

이영욱(홍천) 의원은 "시대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인원을 늘려야하지 않겠느냐"며 "선생님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변호사가 가까이 있어야 한다. 언제든지 변호사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 접근성이 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옥녀 도교육청 정책국장은 "강원도변호사협회와 최근 업무협약을 맺은 이유"라며 "변호사 180명이 교원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례를 발의한 김용래(강릉) 의원은 이날 "변호사 채용 공고를 해도 안 들어오는 이유 중 하나가 상대적으로 낮은 월급 등의 처우"라며 변호사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이번 조례는 도교육청에 교권전담변호사가 있는 것을 알리는, 첫 발을 댄 조례"라며 "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가 5일 열려 김길수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서영

담대상을 공무원 등으로 넓히고, 변호사 처우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위원회는 도내 대학에 '천원의 아침밥' 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의 '강원특별자치도 아침식사 지원

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전찬성)를 원안 가결했다. 조례가 오는 1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4년 3억4000만원을 시작으로 연간 5억여원 규모의 지원근거가 마련된다. 기획행정위는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하석균)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기존의 장학생 신청권자인 시·군별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문고지부회장 외에 '직장·공장새마을운동협의회장'을 추가했다. 이철화

2023 09 05 ()

G1방송

'교원 무료법률상담 조례' 도의회 교육위 통과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최근 교육 현장에서 증가하고 있는 법적 분쟁에서 교원들이 효율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김용래 도의원이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과 법률적 고충 해소를 위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례에는 교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게 하는 등 법률적 조력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교육활동 보호" 강원 교원 무료 법률상담 조례안 원안 가결



김용래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강원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5일 국민의힘 김용래(강릉3)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 무료 법률상담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 증가하는 교육활동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 교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 통과 시 교원은 앞으로 법적인 문제 발생 시 법률전문가와 신속하게 무료로 상담하고, 지속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연합뉴스, 미디어이슈 등 36개 언론사 보도

2023 09 05 ()

스포츠서울

심오섭 강원특별자치도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출산.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산모의 영유아 돌봄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



심오섭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이미지. 사진|강원특별자치도의회

[스포츠서울 춘천=김기원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오섭 의원(강릉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모에 대한 지원 중, 산모의 영유아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을 증대와 산모의 양육 편의 증대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산모의 영유아 돌봄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이 핵심 사항으로, 현재 중위 소득 기준 150% 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건강 관리사 파견 사업 중 부가서비스로 지원되는 큰아이 돌봄 사업의 경우 산모 자부담금의 90%까지만 지원이 가능했는데,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만 5세 이하 영유아 돌봄의 경우 산모의 자부담금이 전혀 없게 되어 산모들의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심오섭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는 18개 시군 중 12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일 정도로 인구 감소 문제가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다"며, "이런 절박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산모의 출산과 양육에 대해서 만큼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우선적으로,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지원을 아낌없이 하는 것이 맞다"고 강변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2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acdcok@hanmail.net

2023 09 05 ()

신아일보

심오섭 강원도의회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조덕경 기자

산모의 영유아 돌봄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오섭 의원(강릉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오섭 의원(강릉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모에 대한 지원 중, 산모의 영유아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율 증대와 산모의 양육 편의 증대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산모의 영유아 돌봄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이 핵심 사항으로, 현재 중위 소득 기준 150% 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건강 관리사 파견 사업 중 부가서비스로 지원되는 큰아이 돌봄 사업의 경우 산모 자부담금의 90%까지만 지원이 가능했는데,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만 5세 이하 영유아 돌봄의 경우 산모의 자부담금이 전혀 없게 되어 산모들의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심오섭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는 18개 시군 중 12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일 정도로 인구감소 문제가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다”며, “이런 절박한 상황을 타계하려면 산모의 출산과 양육에 대해서 만큼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우선적으로,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지원을 아낌없이 하는 것이 맞다”고 강변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2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

뉴스투나잇, 신한뉴스 등 31개 언론사 보도

강원도민일보

2023 09 06 ()

강원청년 1인 가구 3분의1 "지금처럼 혼자 살 것"

도여성가족연구원 생활실태조사
지난해 도 1인 가구 비율 전국 3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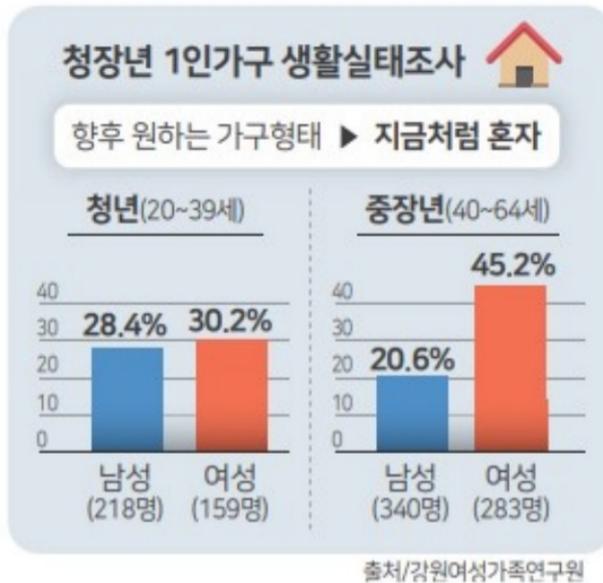
▲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1일 '여성 가족 복지 정책 포럼' 개최

강원지역 1인가구 비율이 급증하는 가운데 혼자 사는 강원청년의 3분의 1은 "계속 혼자 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원장 김숙영)이 최근 공개한 '강원특별자치도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분석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 도여성가족연구원은 최근 김명선 도행정부지사와 정재웅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가족·복지정책 포럼'을 개최, 해당 보고서를 공개했다.

허목화 연구위원이 진행한 도내 청장년(20~64세) 1인가구 1000명 대상 생활실태조사 결과 '향후 원하는 가구 형태'를 묻는 질문에서 청년(20~39세)여성의 30.2%, 청년남성의 28.4%가 '지금처럼 혼자'라고 답했다. 같은 질문에서 중장년(40~64세) 여성은 45.2%가 "혼자 살겠다"고 응답, 같은 연령대 남성(20.6%)과 큰 차이를 보였다.

또 1인가구로서의 1순위 어려움으로 청년 남성은 '식사준비·빨래·청소 등 가사활동(23.4%)'을, 청년 여성은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때 대처의 어려움(27.7%)'을 꼽아 차이가 뚜렷했다. 중장년 남성은 '곤란하거나 힘든 점이 없음(30.3%)',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19.4%)' 순으로 답한 반면, 중장년 여성은 '몸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28.6%)', '생계유지의 어려움(21.2%)' 순으로 역시 차이를 드러냈다.



1인가구 남녀 비율은 60세 이하까지는 남성 1인가구가 5~6%p 더 많지만 60~69세에서 남자 20.4%·여자 21.1%로 비슷해진 후 70세 이상은 남자 12.0%·여자 34.7%로 여성이 크게 앞질렀다. 여성 노인 1인가구 맞춤형 지원 정책 필요성을 뒷받침 하는 통계다.

강원지역 1인 가구 비율은 지난해 기준 37.2%로 대전(38.5%)과 서울(38.2%) 다음으로 전국 세번째로 높았다. 전국 평균(34.5%) 보다는 2.6%p 높다.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도내 1인가구는 '경제자립'과 '주거안정'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장년층(50~64세) 1인가구의 경우, 공동주택에 사는 비율이 13.0%, 지하·반지하도 8.1%를 차지했다. 통계청의 2020인구총조사에서 강원지역 1인가구 주거 형태는 자가(41.9%) 다음으로 월세가 37.6%로 많았다.

도여가원은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1인 가구 정책 협의체 구성과 지원정책 포털 운영을 제안했다. 또 △시군별 1인가구 지원센터 지정 △1인 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소모임·여가활동 지원 등) △고립 1인가구 발굴 △노인 1인가구 맞춤형 돌봄사업 확대 △미성년 1인가구 안전도어 설치지원 등을 제시했다.

김만재 강릉원주대 교수는 토론에서 "1인가구 상당수를 차지하는 노인은 이미 주된 복지 대상인데 청년층도 별개의 정책대상으로 부상했다"며 "1인가구 밀집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 고립 가구를 발굴하고 기존 사업과 연계하는 동시에 청장년 1인가구 대상의 일상돌봄 서비스 확대가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인가구 담당부서 조직이 우선 필요하며 지원 포털 운영시 주택 관련 구체적 정보들을 취합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구원은 포럼에서 '도 경로당 활성화 방안(연구위원 민연경)'과 '도내 기업 육아재택근무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연구위원 이정민)' 연구결과도 발표, 유종우 노인회 원주시지회장과 윤현중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가 각 분야에서 지정토론 했다. 강주영

강원도민일보

2023 09 06 ()
10



제27회 원주양성평등대회가 5일 백운아트홀에서 원주시 주최, 시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열렸다.

‘누구나 평등한 원주’ 양성평등대회 현장 낭독·유공자 포상

제27회 원주양성평등대회가 5일 백운아트홀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누구나 평등한 원주’라는 주제로 열렸다.

원주시와 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원강수 시장, 이재용 시의장, 안정희도 여성단체협의회장, 김의도 강원도민일보 전무·원주본부장, 김정윤 시사회단체협의회장, 원은향 시 여성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한 협의회 소속단체장 및 회원들이 참석했다.

1부 기념식은 남녀평등현장 낭독과 양성평등발전 유공자 포상, 2부 행사는 색소폰 공연과 트로트 가수 공훈의 공연으로 진행됐다.

남양순 대한미용사회 시지부장·

박만호 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정금자 아우름봉사단장·정유아 시 여성기업인연합회장이 원주시장상, 부혜숙(한국여성예림회 시지회)·유분자(시 시민복지센터 여성회)씨가 시의장상을 수상했다.

우미애 전 시 여성복지후원회장은 시 여성단체협의회 공로패, 하석균·최재민 도의원은 협의회 감사패, 박필여 전 시 시민복지국장과 방성호 사회복지대학 총동문회장은 도 여성단체협의회장 감사패를 각각 받았다.

권혜민 khm29@kado.net

江原日報

2023 09 06 ()
11



횡성지역 학교 군용기 소음피해 대책협의 횡성지역 각급 학교 군용기 소음 피해 대책 협의가 5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신경호 교육감과 김명기 횡성군수, 최규만 도의원, 실무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져 소음 대책 지역 내 학교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학교별 요구 사항에 대해 검토했다.

江原日報

2023 09 06 ()

19

전국에서 발생되고 있는 무동기 범죄, 일명 ‘묻지마 범죄’로 대한민국이 불안하다. 최근 성남 ‘묻지마 범죄’의 피의자는 인도로 차량을 돌진해 5명을 다치게 한 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흥기를

휘둘러 9명을 다치게 했다. 끔찍하고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묻지마 범죄’는 우발적인 범죄로 볼 수 없을 만큼 치밀한 계획과 다양한 범행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각자도생의 시대, 온라인 쇼핑몰에는 호신용품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서울에 취직한 딸의 원룸을 구해주고 온 지인은 필자에게 호신용품을 사용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상담해 왔다.

형법 제21조는 ①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②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③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방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 있어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사례는 하늘의 별 따기다. 관례가 실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르면, 상대방이 흥기를 가지고 위협하는 상황이면 손을 쳐서 흥기를 떨어트리게 하는 정도가 인정될 뿐 그 이상으로 나아가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즉, 정당방위로

강원포럼

임미선 강원자치도의원



인정되려면 공격을 받기 전 상대방을 먼저 공격해선 안 되고, 폭행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흥기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방어 수단이 공격 수단보다 수위가 높아 과잉방위에 해당될 수 있다. 이처럼 정당방위 인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호신용품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 등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수사기관의 범인 검거 과정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심지어 과잉진압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일이 부지기수이고, 수억원까지 배상하라는 판결도 볼 수 있다. 이에 법무부가 최근 대검찰청에 생명과 신체의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의 물리적 행사에 대해 경찰과 일반 시민의 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의 적극적인 검토를 지시했다고 하니 현실적인 법 적용의 개선이 기대된다.

문제는 ‘묻지마 범죄’ 예고 글이 급

증하며 시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도내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흥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20대와 SNS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10대가 체포됐다. 묻지마 범죄 예고 글을

올린 행위는 더 이상 경범죄처벌법으로 규율해선 안 된다. 사안에 따라 협박죄 또는 살인예비죄가 검토될 수 있겠고, 범행 의사 없는 예고 글로 수사가 이뤄지게 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될 수 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 이에 지자체 차원에서의 사회 안전망 구축, 범죄 예방 대책을 강구

해야 한다. 우선 강원

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치안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간 거버

넌스를 통한 범죄 예방 활동에 주력해야 한다. 범죄취약지역뿐만 아니라 도내 어느 곳이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 환경 조성, 안전 대책이 절실하다.

아울러 도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는 지원 조례 및 지원센터 등을 통해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립 청년과 집에만 머무는 은둔 청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강원자치도에서도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서둘러 고민해야 한다.

지자체 ‘묻지마 범죄’ 대책 절실

2023 09 05 ()

KBS 춘천

지정 요건 되는데...속초시, 접경지역 누락 '피해'



[앵커]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초시는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접경지역에서 빠져 있습니다.

결국, 각종 군사 규제를 받으면서도 정부 지원에서는 배제된 상태입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성군 경계와 맞닿은 속초시 노학동입니다.

민통선에서 20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민통선에서 25킬로미터 이내 시군을 정부는 접경지역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대로라면, 속초시 전체 105제곱킬로미터 가운데, 약 절반이 25km 이내에 포함되지만, 속초시는 공식 접경지역이 아닙니다.

반면, 속초와 여건이 비슷한 춘천시와 경기도 고양시 등은 2010년을 전후해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시행령 개정 당시 속초시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겁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속초시는 다른 접경지역이 받고 있는 국비 등 재정적 지원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마다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배정받고, 관련 사업 시 국비 지원을 최대 80%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김성림/속초시 부시장 : "이번 달에 (관련)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속초시가 접경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 행위 제한과 같은 다양한 군사 규제를 받고 있는 만큼, 속초시의 접경지역 포함이 당연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강정호/강원특별자치도의원 : "(군사 규제)로 시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기 때문에 접경지역 특별법에 지원 대상으로 반드시 포함돼야만 속초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속초시는 국회에 접경지역 지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정부 설득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

정면구

江原日報

2023 09 06 ()

01

道 내년 세수 3천억 핑크 ‘재정한파’ 우려

지방교부세 1,200억 이상 삭감·지방세 2,000억 부족 전망
연내 추가 수령 예정 교부세 4천억 중 일부 못 받을 가능성
재정자립도 낮은 강원도 치명적 ... 도 “긴축재정 불가피”

내년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교부세가 1,200억원 이상 삭감되고 지방세 역시 최대 2,000억원 이상 부족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온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세는 강원자치도 예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는

점에서 유례없는 ‘재정 한파’가 불어 닳힐 전망이다.

강원자치도는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인 1조2,652억원의 지방교부세를 확보했다. 현재 8,600억원 정도가 교부됐고 4,000억원가량은 연내 추가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당초 약속된 4,000억원의 교부세 일부는 올해 받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돌고 있다.

더욱이 내년에는 큰 폭의 교부세 감소가 확정적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교부세를 역대 최대 규모인 8조5,000억원 감액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 비해 11.3% 줄어든다. 강원자치도 역시 내년 지방교부세가 1,200억~1,300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수입과 기계적으로 연동돼 자동으로 배분, 도의 재원이 된다. 내국세 수입 자체가 급감해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교부세 감소를 그대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도의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도는 올해 세수 목표를 2조1,572억원으로 잡았으나 1,700억원에서 최대 2,000억원 이상 덜 걷힐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올해 당초예산 기준 도의 자체 예산 중 지방세는 30.35%, 지방교부세는 18.6%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세는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비교적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재원이란 점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원자치도 입장에서는 결국 재량권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비 확보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자체 재원은 줄어들며 중앙정부 재정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도 관계자는 “타 광역시·도와 함께 올해 지방교부세만큼은 기존 계획대로 집행해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 내년 초긴축재정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곧 예산편성 방향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영기자**

江原日報

2023 09 06 ()
02

강원자치도 CI·캐릭터
우수디자인 동시 선정



◇강원자치도 캐릭터(왼쪽)와 CI.

강원특별자치도가 새롭게 개발한 CI(상징마크)와 캐릭터(강원이, 특별이)가 ‘2023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우수디자인으로 선정됐다.

강원자치도의 CI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순수 한글을 활용한 워드마크(글자를 형상화한 마크)를 도입해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호평을 받았다. 특히 지자체의 CI와 캐릭터가 동시에 선정된 것은 강원자치도가 처음이다.

강원자치도의 CI는 ‘상승’을 그래픽 모티브로 형상화했다. 강원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는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모습을 담았다. ‘강원이’와 ‘특별이’는 대한민국의 상징인 호랑이와 강원자치도의 상징 반달가슴곰을 의인화했으며 귀엽고 푸근한 형태의 라인형 캐릭터로 개발됐다.

굿디자인 어워드는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 디자인 분야 최고 권위의 시상식이다. 역대 선정 작품으로는 삼성전자 갤럭시 Z-Flip, LG전자 OLED TV 등이 있다. 최기영기자

강원 스마트관광 성숙도 전국 7위 그쳐

권슈머인사이트·경희대 평가 전년 조사 대비 1단계 하락
디지털 준비 등 인프라 부족 영향... 시·군 5곳 상위 30위권

강원특별자치도가 스마트관광도 시 성숙도 평가에서 전국 16개 시·도 중 7위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인 국내 관광지라는 명성과 달리 낮은 순위를 기록, 스마트관광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전략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행·여가 리서치 전문기관 권슈머인사이트와 경희대 스마트관광연구소가 공동으로 수행, 5일 발표한 '2023 스마트관광도시 성숙도 지수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해당 조사에서 강원도는 1,000점 만점에 605점으로 전국 16개 광역자치체 중 7위에 올랐다. 지난해 조사보다 1계단 떨어진 순위다. 1위는 628점을 기록한 제주였다. 이어 서울(618점), 부산(615점), 광주(615점)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스마트관광도시 성숙도 지수(ST-CMI) 평가는 지난 5월 여행자와 현지인 총 5만1,000명을 대상으

로 각 지역의 매력성, 지속가능성, 디지털화, 협력적 파트너십, 접근가능성 등 5개 영역을 평가하도록 하여 산출한 지수다. 해당 지수는 지자체의 관광 자원과 스마트도시 인프라 중 한 측면에 편중되지 않고 동시에 고려하는 평가지표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평가에서 도는 전국 평균(599점)을 턱걸이로 넘기며 예상보다 부진한 점수를 보였다. 전년 대비 성장률도 저조했다. 16개 시·도 중 9곳의 점수가 지난해 조사보다 올랐지만, 도는 동일 점수를 유지하는 데 그쳤다. 풍부한 관광 자원에 비해 디지털

준비 등 관광 인프라가 부족한 점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기초지자체 부문에서는 상위 30위 지역에 도내 시·군 5곳이 포함됐다. 강릉이 646점으로 7위에 안착했다. 이어 춘천(633점) 14위, 삼척과 속초가 630점 동점으로 공동 21위, 영월이 623점으로 30위에 올랐다. 정남호 경희대 스마트관광연구소장은 "전통적인 여행자원이 풍부한 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자체와 지역민의 노력에 따라 단기간에 스마트 관광 경쟁력을 높인 사례들이 있다. 이들 지역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김현이기자

강원도민일보

도내 중학생 5명 중 1명 '수학 성취기준 미달'

코로나19·자유학년제 여파
지속적 학습결손 원인 분석
도교육청, 맞춤 지원·상담 등
학력 향상 대책마련 나서

학년	교과	도달 학생	미도달 학생
중1	국어	9041(93.1%)	667(6.9%)
	영어	8746(90.2%)	952(9.8%)
	수학	7322(74.1%)	2553(25.9%)
중2	국어	8521(92.6%)	677(7.4%)
	영어	7571(82.3%)	1633(17.7%)
	수학	7307(77.9%)	2070(22.1%)
중3	국어	7705(91.6%)	702(8.4%)
	영어	7196(84.2%)	1353(15.8%)
	수학	5928(69.0%)	2651(31.0%)

강원도내 학생들의 수학 교과 성취도 수준이 심각한 수준으로 진단됐다. 중학교의 경우 수학 교과의 성취수준을 달성하지 못한 비율이 20%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 특별자치도 교육청은 5일 '2023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점

수 구간별 학생분포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성취기준 도달 여부다. 진단 결과 도내 학생들의 수학

교과 성취 수준이 타 교과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중3의 경우 미도달 학생 비율이 전체 응시생의 31%(2651명)로 집계, 도내 중3학생 3분 1은 도교육청이 정한 성취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는 중3국어 교과 미도달 학생 비율(8.35%)과 비교해 4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중1(25.9%), 중2(22.1%) 역시 높은 비율로 미도달 학생이 발생했다. 미도달 학생 비율이 20%를 넘긴 것은 중학교 수학 교과가 유일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미도달 수준이 10%가 되면 많은 것으로 보는데, 중3학생들의 수학 미도달 비율은

정말 심각하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결과가 발생한 원인으로 코로나19 장기화 여파와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로 인한 학습결손 누적 등을 꼽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이후 미도달 학생 비율이 급증했다. 특히 수학의 경우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학생과 교사가 함께 문제를 풀지 못하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기존의 자유학년제로 인해 기초가 부족한 1학년 학생이 그 상태로 2,3학년에 진학해 학습결손이 누적되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올해부터 자유학기제로 운영되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강원학생들의 낮은 수학 교과 성취도 가 문제로 확인되면서 도교육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대책 마련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수학교과에 대한 상담 확대 △멘토링 사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해 12월 중으로는 미도달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강원학생향상도평가'를 실시하고, 향후에는 학부모들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심리·정서' 검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심영택 도교육청 더 나은학력지원관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연속적인 학력 지원 체계와 학력 향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민엽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도 장애인체력인증센터 개소식이 5일 홍천군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정광열 경제부지사, 신영재 홍천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도내 첫 장애인체력인증센터 홍천서 개소

강원특별자치도 최초의 장애인체력인증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도장애인체육회는 5일 홍천군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체력인증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정광열 도 경제부지사, 신영재 홍천군수, 박영록 홍천군의장, 임조성 도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회장, 김미숙 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달 개소해 시범 운영 중이었

던 도 장애인체력인증센터는 이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개소식은 국민의례, 내빈 소개, 추진 경과 보고, 인사 말씀, 축사, 현판 제막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가 끝난 뒤 내빈들은 홍천군장애인국민체육센터 2층에 위치한 장애인체력인증센터를 찾아 직접 체력 측정 및 운동처방 서비스를 체험했다.

정광열 경제부지사는 “강원자치도에도 다양한 장애유형의 대상자에게 맞춤형 체력 측정과 운동처방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센터가 만들어져 기쁘다”며 “더 많은 분이 이 같은 서비스를 같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더 많은 체력인증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신영재 군수는 “이번 센터 개소는 홍천군민뿐 아니라 강원도민들께도 특별한 선물”이라며 “앞으로 잘 운영하겠다. 도내 장애인분들을 비롯한 강원도민의 체력을 홍천군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권순찬기자

江原日報

기업회생 신청 밝히기 하루전 20억 넘긴 양양군 '의혹투성이'

플라이강원 부당 지원 수사 郡 기업회생 계획 파악시점 쟁점 하루만에 20억 예산 신청에서 지급까지 ... 금고 마감 직전 집행 당초 임직원 인건비 한정했던 지원금 다른 항목에 사용 변경도

속보=경찰이 플라이강원에 20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의혹으로 고발된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수사를 착수(본보 5일자 1면 보도)한 가운데 양양군의 플라이강원 '기업회생 신청' 계획 파악 시점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플라이강원은 지난 5월15일 양양군으로부터 20억원의 운항장려금을 받은 뒤 24시간도 안 된 16일 임직원 간담회에서 '기업회생 신청' 방침을 밝혔고 1주일 뒤인 23일 서울회생법원에 매출 감소로 인한 부채 누적과 운항 중단에 따른 유동성 부족 등을

이유로 기업회생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양양군은 5일에도 "플라이강원의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플라이강원의 경영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양양군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양양군이 왜 문 닫을 기업에 거금을 급하게 집행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는 대목이다.

■무리하게 20억원 지원=양양군이 플라이강원에 20억원의 운항장려금을 지원한 근거는 2020년 9월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항공

◇플라이강원 주요 일지

날짜	주요 내용
2019. 3.05	국토부 항공운송사업 면허(ALC) 취득
11.22	국내선 첫 취항
2020. 2	국내선 취항
2023. 4.17	양양군 플라이강원 항공사업 유예안서 체결
5.08	양양군의회 운항장려금 승인
5.15	플라이강원 재정교부 신청
5.15	양양군 운항장려금 지급
5.20	국내선 노선 운항 중단
5.23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6.16	기업회생 개시 결정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양양군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와 지난 4월 양양군과 플라이강원이 체결한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강원 항공사업 유지 협

약서'다. 군은 그동안 조례에 따라 플라이강원에 대해 광역시설 사용료 등의 소규모 지원을 했지만 2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4월 협약서를 근거로 제1회 추경에 20억원의 예산을 편성, 지난 5월8일 군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군은 당시 지원 근거를 조례로 폄하였던 군의회는 플라이강원과 체결한 협약서가 아닌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지원금 집행 속전속결 왜?=양양군은 5월8일 군의회로부터 예산을 승인받은 뒤 1주일이 지난 15일 플라이강원에 운항장려금을 전액 집행했다. 15일은 플라이강원이 양양군에 약속한 20억원을 지급해 달라

는 재정교부서를 신청한 당일이다. 양양군은 이날 4월 체결했던 플라이강원과의 협약서 내용도 일부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봉균 의원은 "당초 임직원 급여 지급으로 한정했던 협약서 내용이 이날 갑자기 인건비 이외의 다른 항목으로도 쓸 수 있는 '운항장려금'으로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플라이강원은 군의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요구했던 사업계획서도 이날 뒤늦게 제출했다. 재정교부 신청을 받은 양양군은 이날 일상감사 요청을 거쳐 금고 마감 시간 직전에 지원금을 집행했다. 결국 20억원의 예산이 하루만에 신청부터 지급까지 이뤄진 셈이다.

군의회는 지난 5월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양양군이 성급하게 장려금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플라이강원 위기 몰랐나?=양양군과 군의회는 지난 5월3일 군의회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플라이강원의 대표가 바뀔 경우 체결한 협약서의 유효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양양군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김의성 의원이 "플라이강원이 어떻게 되나"라는 질문에 양양군 관계자는 "개인 사업장의 영업상 비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표하기는 좀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이 "플라이강원이 운항도 많이 줄고 여러가지로 보면 굉장히 불안한데 이게 지금 어떻게 협약서만 갖고 믿어야 되나"라며 대책을 요구했고 군 관계자는 "우려하는 부분은 마찬가지로"라며 "고민을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규호·이명우기자

강원도민일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동해 망상1지구 개발사업의 기존 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가 소유한 토지 226필지(184만 3366㎡)에 대한 2차 일괄 경매가 4일 실시돼 국내 건설사도급순위 15위인 중흥토건에 낙찰됐다. 경자구역 동해시 망상1지구 일부(노봉해변) 모습.

경자구역 동해망상1지구 기존 시행자 소유 토지 경매 완료

동해이씨티 대표 법적대응 예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동해 망상1지구 개발사업의 기존 시행자 소유 토지에 대한 경매가 2차에서 완료돼 낙찰자가 결정됐으나 법적 논란은 당분간 이어진 전망이다.

5일 본지 취재결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 소유의 토지 231필지(187만

3314㎡) 가운데 226필지(184만 3366㎡)를 일괄경매로 2차 기일을 진행했다. 감정평가액이 543억 6411만 500원인 이 물건은 380억 9000만원으로 단독 응찰한 중흥토건에 낙찰됐다.

이와 관련, 추광규 동해이씨티 대표는 "부지 경매 낙찰 전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먼저한 것은 선행 행정 행위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강원특자도를 대상으로 가처분·본안소송을 9월

중 접수하고 10월 중 매몰비용 169억여원에 대해 강원특자도와 동해시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기존 사업자가 토지매수 등의 지연으로 시행기간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하는 것이 확실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인수

강원도민일보

2023 09 06 ()
/ 17

춘천 캠프페이지 개발 기대 크다

-도시재생 시범지구 후보지 선정, 시민 의견 중요

2005년 미군 부대 철수 이후 20여년째 표류하고 있는 춘천 캠프페이지가 문화와 첨단산업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개발될 전망이다. 캠프페이지는 최근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2023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시범지구로 지정되면 건축·도시·교통·재해 등을 통합 심의해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합니다. 장기간 담보에 머물렀던 캠프페이지 개발 사업이 활력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춘천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후보지 선정은 지지부진했던 캠프페이지 활용사업에 돌파구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도시재생 혁신 지구는 대도시·지방 거점도시에 있는 대규모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상업·산업·주거 등 도시기능을 복합적으로 도입, 지역활력을 회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물론, 자연녹지지역을 상업지역·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높일 수 있어 토지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춘천시의 구상은 주목할 만합니다. 전체 사업 면적은 52만㎡를 대상으로 문화공원과 보행 네트워크 등을 조성하고 복합용지 2곳에는 관광·첨단산

업·생활 SOC 등을 구축합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대응 도시숲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2조원으로 추산되는 사업비는 공공주도 개발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본격 개발까지는 문화재 발굴과 토양오염 정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오염 토양 반출을 마칠 것이라는 계획이지만, 문화재 발굴 조사도 남아 있어 2025년은 돼야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시는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계획을 수립, 공모를 신청하고 2026년 상반기 시행계획 인가를 받아 착공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관심이 큰 사업이어서, 그만큼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산업비중이 강조돼 공원 기능이 약화하면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너무 많은 시설을 낳다 보면, 자칫 짜깁기식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청 이전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복합적인 기능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난개발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녹지 공간 확보는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춘천시의 계획을 토대로 시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폭넓게 수렴한다면, 사업 추진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09 06 ()
/ 17

주민참여예산 부진 씻는 개선있어야

-행안부 발표, 강원 주민세징수액보다 못하고 제안건수 하위

올해 세금수입이 급격하게 줄면서 긴축재정 압박이 큰 가운데 도와 시군에서 예산편성 작업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피부에 와닿도록 예산을 쓰자면 주민 의사가 충실하게 반영되어야 하는데, 예산 편성과 집행 합리성과 공정성에 기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성적이 강원은 매우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에서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결과를 분석해 '지방재정365'에 공개했는데, 철원군이 주민참여예산 0원 지자체 8곳에 포함되는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지자체 유형이 같은 도단위를 비교해보면 강원 주민자치예산 실적과 성과가 최하위 수준에 있음을 더 실감하게 됩니다. 재원을 주민세(개인균등할)에서 활용하는 '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 반영액은 강원 최하위였습니다. 48억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전남이 469억원으로 1위인데 강원보다 9배 이상 많은 예산 규모입니다. 경기 299억, 전북 168억, 경남 153억, 충남 140억, 제주 110억, 경북 105억, 충북 99억원 순으로 50억원 이하의 강원뿐입니다. 제주 주민세 징수액이 강원 5분의 1인데도 강원도보다 2배 이상인 110억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강원 주민세징수액이 63억원이나 주민참여예산은 48억원에 불과합니다. 2021년 거둬들인 주민세 금액보다도 못한 곳은 강원 유일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합니다.

예산반영 건수는 경북에 이어 가장 적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원 215건 인 것에 비해 가장 많은 1419건입니다. 무려 7배 가까운 격차를 보입니다. 이렇다보니 주민제안 실적에서도 강원은 저조해 323건으로 제주 348건보다도 적습니다. 가장 많은 경남은 무려 2233건에 달하며 전북은 1431건입니다.

행안부에서는 또 다른 큰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공모 심의를 통하지 않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통해 지자체가 판단해 반영한 사업을 분석한 결과 강원은 소모성·행사성 사업에 건당 금액이 지나치게 높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충남은 건당 평균 1700만원이고 대부분 3000만~5000만원 선인데 비해 강원은 무려 3억6400만원에 달해 기형적 현상을 보였습니다.

고도의 지방자치를 추구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주민참여예산제 성적이 앞서지는 못해도 바닥이어서는 곤란합니다. 우선 2024년 예산안 편성에 개선된 결과를 내놓아 부진을 만회해야 할 것입니다.

江原日報

2023 09 06 ()

/ 19

춘천 캠프페이지 2조원대 개발사업 성공하자면

춘천시의 캠프페이지 부지에 2조원대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춘천시가 2007년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후 16년째 활용 방안을 확정 짓지 못한 상태에서 시민들의 기대가 더욱 크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지난 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캠프페이지 부지를 문화(K-Culture)와 첨단산업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긍정적인 것은 캠프페이지 개발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사업을 바탕으로 추진된다는 점이다. 춘천시는

2023년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후보지로 선정됐다. 최종 후보지로 지정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수도권 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러 면에서 열악한 춘천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문화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 캠프페이지 개발 계획은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큰 획을 그을 수 있다. 때문에 캠프페이지 개발 계획의 취지나 동기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춘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복안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문제는 무슨 일이든 그 청사진이 웅대할수록 준비 과정이 철저해야 한다는 점이다. 앞으로 여러 행정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내년 하반기 최종 선정되면 최대 25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즉, 캠프페이지 개발 계획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춘천시의

시민들 간의 충분한 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 춘천시 전체 개발 계획의 큰 틀 아래서 방향이 잡혀야 한다. 그 래야 사업의 중복을 없앨 수 있다. 캠프페이지 개발 면적이 총 51만㎡ 규모로 방대한 데다 해당 부지를 복합 용지 1·2구역, 주거용지, 공원용지, 공공용지, 녹지용 지로 나눠 개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이번 사업을 일부 지역 문제로 국한해 볼 것이 아니라 통합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시민과 지역 특성을 존중하며 환경을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캠프페이지 부지를 단번에 탈바꿈시켰다는 자체도 무리다.

의욕이 앞선 사업은 오히려 시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비전을 갖고 차분하

국토부 도시재생 국가시범지구 후보지 선정

문화와 첨단산업 공존하는 공간 조성 계획

춘천시 전체 개발계획과 연계돼야 시너지효과

게 시작해야 한다. 지난 10여년간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개발 청사진이 수차례 변경되고 토양 오염 부실 정화 파문, 문화재 발굴 절차 등으로 인해 개발 속도가 늦춰지면서 시민들의 피로감이 쌓였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특히 자치단체가 가면 시민은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은 접어야 한다. 여기에다 춘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지역 개발사업과 캠프페이지 개발과의 연계성을 따져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예산 낭비를 줄이고 체계적인 춘천시의 개발 성과를 거두는 길이다. 춘천시의 캠프페이지 개발이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큰 그릇이 되어야 한다.

江原日報

2023 09 06 ()

/ 19

해외여행 수요 급증, 강원관광 경쟁력 키워야 할 때

올해 도내 여권 발급량이 10만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4배 이상 늘었다. 팬데믹 기간 억눌렸던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하며 해외여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외교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도내 발급된 여권은 10만1,804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2만4,151건)보다 4.2배 급증했다.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021년 동기(6,174건)와 비교하면 무려 16.4배 늘었다. 전국적으로 살펴봐도 출국자 수는 폭증했다. 올 상반기(1~6월) 출국자 수는 993만1,000명으로 1년 전(135만명) 대비 858만1,000명 늘었다. 같은 기간 국내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실적은 9,247만달러로 1년 전보다 37.5% 증가했다.

문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여행수지다. 최장 11일의 추석 연휴가 다가오는 데다가 최근 기관·단체들의 해외여행이 본격적으로 재개되고 항공사들의 국제 노선 증편도 이어지고 있어 해외여행 수요는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수그러들고 해외여행 길이 열리면서 여행수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 동안 한국인이 해외에 뿌린 여행 지출이 23억8,000만달러로 외국인들로부터 거둬들인

여행수입(8억9,000만달러)의 2.7배나 됐다. 14억9,000만달러의 적자 규모는 2022년 1월(5억5,000만달러)의 거의 3배 수준이다. 코로나19로 지난 3년간 주춤했던 여행수지 적자가 올 들어 다시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방한객에 비해 기형적으로 많은 해외여행객 행렬은 결코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다.

불어나는 해외여행 수요에 비해 외국 관광객의 방문은 이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외여행에 규제를 가할 수도 없고 단시일 내에 외국 관광객을 확 끌어들이기도 쉽지 않다. 여행수지 적자가 커지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관광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볼거리와 먹을거리, 즐길 거리가 다양하지 못하고 숙박비와 식사비가 턱없이 비싸다. 대부분의 외국인 여행자들에게 한국은 생소하고 국내 여행지 정보도 부족하다. 내국인 여행자들도 “국내에 갈 만한 곳이 없다”며 해외로 떠나고 있다. 강원관광의 경쟁력을 더 키워야 할 때다.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공장이며 고용 창출 효과가 제조업보다 큰 미래형 성장산업이다. 여행수지 악화를 막기 위한 인바운드 관광객 유입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해외 관광객 유치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